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조교수

## 대한민국 산업보건 역사 속 대한산업보건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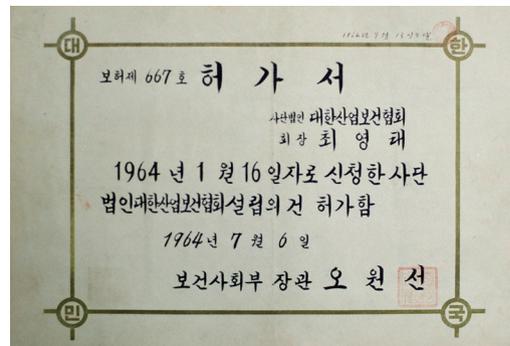
### 들어가며

조선산업보건협회에서 시작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역사는 이제 77년이 되었다. 사람이라면 희수(喜壽)의 나이이다. 산업보건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먼저 희수를 축하드리며,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지난날을 간략하게 돌아보는 글로 희수연 부조를 대신하려 한다.

### 1940-50년대, 산업보건의 시작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산업보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제가 남긴 공장과 광산은 위험하고 더러웠다. 미군정 관료 일부가 산업보건을 개선하려 했지만,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몇 없는 산업보건 전문가마저도 눈앞의 문제인 감염병 관리 등에 동원되던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보건은 민간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산업보건에 뜻이 있는 이들이 모여 협회를 결성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전신인 조선산업보건협회였다. 이들의 계획은 원대했다. 각 도에 지부를 결성하고, 큰 공장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해서 현장 관리와 산업재해 치료를 맡긴다는 기획이었다. 물론 자원 부족으로 실현



19640706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설립허가서

되지는 못했지만, 산업보건을 향한 의욕과 열정만큼은 대단했다.

미군정에 이어 들어선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1949년 산업부흥보건책을 발표했다. 여러 산업 부문의 보건



19710201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지원 개원식

시설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산업병원을 설치한다는 진보적인 기획이었다. 6·25전쟁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건강진단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혹한 현실 앞에서 의욕은 어그러지고 말았다.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산업부흥보건책은 결국 시행되지 못했고, 「근로기준법」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

산업보건은 결국 또다시 민간의 책임이 되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산업보건협회는 해체되었지만, 1949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결성되어 뜻을 이어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의무가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허락된 운신의 폭은 여전히 그리 넓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려웠다.

### 1960-70년대, 산업보건의 제도화와 확장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시기와 마

찬가지로, 정부 내에는 산업보전에 뜻이 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던 일군의 보건사회부 관료가 대표적이었다. 이들의 노력은 실제로 결실을 보기도 했다. 1961년과 1962년에는 「근로기준법」의 보완 입법이 이루어졌고, 1963년에는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에게 산업보건의 실무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여전히 민간의 몫이었다. 일단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재가동해야 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사회단체가 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63년, 산업보전에 뜻이 있던 이들이 국립보건원에 한데 모였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재건된 순간이었다. 재건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시작부터 많은 일을 맡았다. 먼저 산업보건연구회를 개최하여 노동청이나 철도청 같은 정부 기관 관계자와 각 회사의 노동조합 관계자, 보건관리자 등에 산업보건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고, 노동청 등의 용역을

받아 산업보건 실태를 조사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실무와 보건관리자 직무 교육을 맡기도 했다.

산업재해 치료 역시 협회의 중점 사업이었다. 부속 의원이 설치된 회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산업재해에 특화된 기관이 필요했다. 시작은 1965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명동 성모병원에 설치된 ‘직업병 클리닉’이었다. 물론 20병상 규모의 기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환자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시작이 중요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초,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근로복지의원(이후 산업보건서비스센터, 산업보건연구소로 개편)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청계상가를 시작으로 영등포,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마산 등에 의원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 설치된 대한산업보건협회 지부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처럼 1960-70년대를 거치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활동의 폭과 다양성을 계속해서 넓혀갔다.

## 1980년 이후, 산업보건의 선진화

1980년대가 열리며, 한국 산업보건은 다시 한번 큰 제도적 변화를 마주했다. 1980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했고, 무엇보다 1981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독립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에 더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방점을 찍은 법이었다. 이어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고, 1988년에는 노동부 내 산업안전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재해의 증가 때문이었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의 결과, 노동자가 마주하는 기계 설비는 더 크고 빨라졌다. 여기에 더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규모 역시 예전과 달랐다. 1970년과 1980년을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와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은 각각 3배, 6.2배, 33.9배 증가하였다.

산업보건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80년대 초반부터 근로자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계자 직무교육대행기관, 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산업보건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새로이 시작된 보건관리대행제도에 따라, 전국 보건관리대행의 상당수를 담당하기도 했다.

전국적 활동 역시 강화되었다. 산업보건연구소를 산업보건센터 체제로 개편하고, 대전, 울산, 전북, 충북, 의정부, 양산 등에 산업보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는 각 지역의 산업보건 활동을

1970년 청계상가 봉제공장의 모습  
19710201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 의료진과 협회 임원들





19710417 전라남도 근로복지의원 개원식  
19890707 중앙분석실험실 개소식 후 시찰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는 바탕이 되었다. 요컨대 1980년 이후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전 시기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보건의 주축으로 맡은 바를 굳건히 해나갔다.

###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미래

산업보건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계속해서 사업 구성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넓히며 소명을 다해왔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때로는 정부를 대신했고, 때로는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도 마주하건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걸어 온 길은 곧 한국 산업보건의 발전이었다.



19921118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종합평가회의

이제는 제도 확충의 아이러니를 고민할 시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제도가 궤도에 오르며, 사람들은 외려 제도의 그림자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많은 이들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면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가 허다하다. 산업보건도 마찬가지이다. 이 정도면 산업보건 선진국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산업재해 소식은 산업보건의 여전히 빈자리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국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언제나 제도 바깥에 놓인 이들이 존재한다. 희수를 맞이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어깨는 아직도 무겁기만 하다. 물론 희망 역시 없지 않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오랜 노력 덕분에, 산업보건의 현실은 분명 좋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 내일 역시 오늘보다 낫지 않을까.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지난 역사는 앞으로의 미래를 낙관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22년 후 열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백수(白壽)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 ☺